

FIP-2009-0019 (통권 제143호, 2009. 08. 03)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ISSUE
PAPER

Contents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	2
1.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2.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4
3. 노조달래기에 치중한 사측의 노무관리 관행	6
4. 산하노조의 어려움을 투쟁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민노총과 외부세력	7
5. 불법, 폭력적인 시위 관행	7
6.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9
7.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	10
III.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11
※ 참고자료	12
1. '04년 이후 쌍용차의 위기 현황	12
2. 쌍용차 파업 경과	13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노사정책팀 신덕정 연구원과 한지영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364 FAX : 6234-5332 E-mail : djwave@fki.or.kr

● ● ● 요약 ● ● ●

□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
- 노조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
- 민주노총과 외부세력은 생존이 걸린 쌍용차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념 투쟁으로 사태가 변질
-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으로 부상자 속출
-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파업 장기화

〈 노사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7대 문제점 〉

7대 문제점	주요 내용
1.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까다로운 요건 및 노조 반대로 실행 불가능
2.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태도 ○ 적자상황에서 매년 임금인상 요구, 올해도 10% 인상 요구
3. 노조달래기에 치중한 사측의 노무관리 관행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 ○ 회사기물 파손, 라인가동 중지, 관리자 폭행 등의 불법 행위도 용인
4. 산하노조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주노총과 외부세력	○ 민주노총과 외부세력 개입으로 이념투쟁으로 변질 ○ 좌파성향 시민단체는 불법무기를 제조하고, 노조원들에게 사상교육을 실시 *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유혈사태를 조장한다는 의혹도 제기
5. 불법, 폭력적인 시위 관행	○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 과격한 시위
6.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여 일째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7.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	○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로 파업 장기화

● ● ● 요약 ● ● ●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가시화된 이후의 인력조정은 노사 모두 양보하기 어려워 결국 극단적인 노사마찰로 비화
- 노동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 노조의 불법점거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예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쌍용차 사례에서 나타난 극단적 노사관계를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 개선 필요
 - 사측은 투명경영과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한 신뢰구축에 노력하고, 노측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투쟁을 지양
-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불법행위에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 확립
 -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어떤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I. 검토 배경

- 판매 및 영업실적의 부진을 겪는 등 경영상황 악화
 - 2007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량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영상황 크게 악화
- 구조조정을 둘러싼 쌍용차의 노사대립 지속
 - 지난 4월, 쌍용차 사측의 유희인력 2,646명(전체 인원의 37%)에 대한 감원 계획 발표 이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쌍용차 사태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
 -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지고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휴업에 들어간 상황
-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
 -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노·사·정의 잘못된 관행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
 - 노사정의 잘못된 관행, 경직적인 해고 요건, 불법 폭력 시위, 노사간 힘의 불균형,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미확립,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의 개입과 상급단체의 악용 등의 문제점 노출
-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모색 필요
 - 쌍용차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관행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쌍용차 사태로 노출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경우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대 효과
 - * 데이비드 럭(David Ruck) 신임 AMCHAM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하며, 유연성 제고는 고용 및 외국인 투자 증대로 연결된다고 설명¹⁾
 - * “진정한 의미의 노동 유연성이 보장된다면 기업들은(필요할 때)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평소에)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것”, “노동 유연성은 한국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할 것”

1) 매일경제, 「노동유연성 보장되면 기업도 고용 늘릴것」 (2009.2.25)

II. 쌍용차 사례로 본 노사관계 현실

1.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갖춰도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예방적인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력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적시에 인력 조정을 하지 못한 쌍용차는 전체 종업원의 37%에 달하는 잉여인력(2,646명)에 대한 대규모 인력조정을 하게 되어 근로자와 갈등 격화
 -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실질적 해고자는 100명 수준으로 축소
 - 당초 2,646명이 감원 대상이었으나 실질적 해고자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여 정리해고가 이루어져도 기업 회생이 불투명
- * 유희인력에서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한 정리해고자 976명 가운데 450여명은 희망퇴직 기회 재부여, 320여명은 분사 및 영업직 전환, 나머지 200명 중 100명은 복직 후 무급휴직, 100명은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추진 계획

〈 근로기준법 상 해고 요건 〉

- *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에 대한 해고 신고 :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10명 이상 시), 100명~999명(근로자의 10% 이상 시), 1,000명 이상(100명 이상 시)
- 엄격한 해고요건으로 쌍용차의 인원조정이 지연된 반면,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경제위기에 따른 인원 조정을 단행
- GM은 미국 내 근로자 수를 작년 말 6만 1000명에서 내년 말까지 4만 명으로, 공장 수를 47개에서 34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

〈 완성차업계 감원 계획 〉

기업명	국가	감원 계획
GM	미국	2010년까지 비정규직 21,000명 감원
폭스바겐	독일	16,500명
닛산	일본	20,000명
도요타	일본	비정규직 6,000명, 정규직 1,000명
혼다	일본	비정규직 4,300명

- 엄격한 해고요건으로 인한 인원조정의 지연 결과, 불법파업 노조원 100명을 살리기 위해 20만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빠질 상황 발생
- 쌍용차의 실질적 해고 대상 노조원 100명의 정리해고를 막기위해 이루어진 불법 점거로 쌍용차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20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및 직·간접으로 관련된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
- 1차 협력업체 직원이 5만명이며, 2, 3차 협력업체가 5만명으로 협력업체 직원이 모두 10여만명에 달하며, 직간접으로 쌍용차에 관련된 근로자까지 모두 합하면 2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 * 협력업체의 2009년 상반기 매출액은 1차 협력사가 5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2차 협력사는 285억원으로 86%감소하였고, 2009년 6월말 기준 고용 현황은 1차 협력사가 1,363명으로 31%, 2차 협력사가 1만 1,589명으로 19% 감소
- * 1차 협력업체 32개(7.13 현재 부도 1, 법정관리 3, 휴업 25)와 2차 협력업체 339개 (7.13 현재 부도 9, 폐업 10, 휴업 76)가 파산될 위험²⁾

2) 서울경제, 박영태 공동관리인 단독 인터뷰(2009.7.13)

〈 쌍용차 1, 2차 협력업체 피해 상황³⁾ 〉

구 분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매출	2008년 상반기	2,162억원	2,023억원
	2009년 상반기	592억원	285억원
		(73%감소)	(86%감소)
고용	2008년말	1,986명	1만4,356명
	2009년 6월말	1,363명	1만1,589명
		(31%감소)	(19%감소)
임금	2008년 월평균	215만원	184만원
	2009년 월평균	158만원	138만원
		(27%감소)	(25%감소)

* 주 : 1차 협력사는 쌍용차 의존도 50% 이상인 30개사, 2차 협력사는 1차 업체와 거래하는 333개사 기준

2.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 노조는 기업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

* 강성으로 유명한 전미자동차노조(UAW)도 미국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GM과 크라이슬러 등에서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GM과의 단협 개정 시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할 결과, 연 12~13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여전히 과도한 복리후생을 요구하고 있음⁴⁾

〈 2009년 GM-현대차 임단협 비교 〉

GM 단협개정안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 급여 동결, 상여금 중단, 휴가 축소, 퇴직자 의료지원 축소 등 복지혜택 감소	- 총고용보장
- 2015년까지 파업 전면금지	- 2009년 결산 후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정액) 지급
-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에 대한 회사 측 출연금 삭감	- 신차종 개발시 국내 공장에서 우선 생산
- 소형차 해외 생산 비중 축소	- 3번째 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 생산직 월급제(고정 OT, 할증수당)로 전환 별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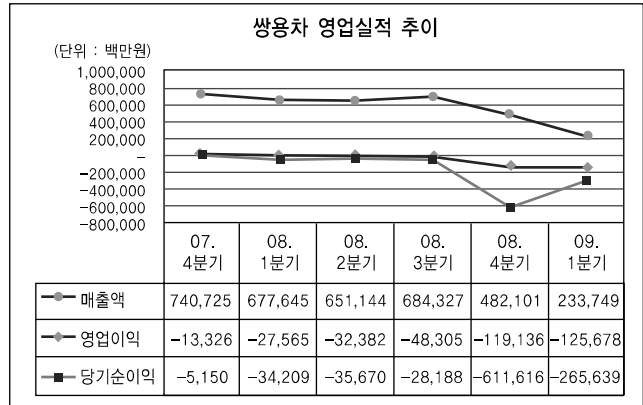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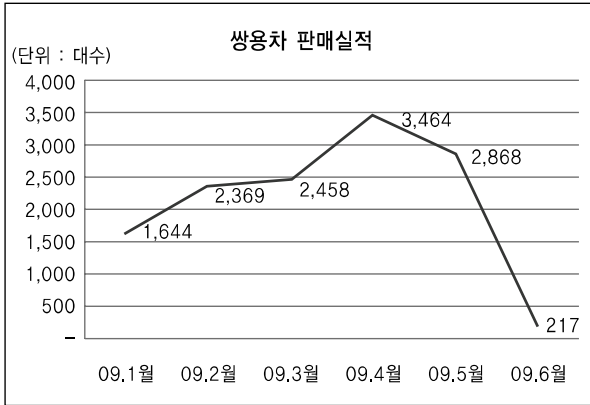
○ 수년전부터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정리해고가 진행중인 금년에도 10%의 임금인상을 요구

- 2007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량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생산성이 크게 하락

3) 한국경제 (2009.7.20)

4) 매일경제, 「확 달라진 전미자동차 노조...노·노 갈등 현대차 노조」 (2009.6.15)

〈 쌍용차 영업실적 및 판매실적 추이⁵⁾ 〉



-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 결과, 사측은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인상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

〈 쌍용차 영업실적 대비 임금협상 결과 〉

년도	당기실적 (당기순이익)	임금협상
2004년	당기순익 114억원	▲기본급 7만5000원(6.18%) 인상, ▲호봉승급분 1만원, ▲제도 개선비용 1만원, ▲성과급 200%(12월말 지급), ▲하반기 생산 목표 달성 격려금 100% 지급, ▲타결일시금 100만원 등
2005년	당기손실 1,034억원	▲기본급 5만9000원(기본급 대비 4.94%) 인상, ▲생산장려금 100만원, ▲신차 출시 격려금 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100만원(연말 지급) 지급 등
2006년	당기손실 1,960억원	▲임금 및 제수당 동결, ▲구조조정 철회로 고용보장, ▲고용 유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여한 생산체제 구축, ▲2009년까지 신규차종 개발·신엔진 개발·영업 A/S 네트워크 향상 등에 매년 일정규모(3천억원 전후) 투자 등
2007년	당기순익 116억원	▲기본급 5만원 인상, ▲판매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
2008년	당기손실 7,097억원	▲기본급 6만2000원 인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려금 100만원 지급, ▲단체협약 일부 개정 등

- * 자녀 대학교 학자금 전액 지원, 병원 입원 시 조합원 본인은 병원비 5만 원 이상 시 전액 지원, 직계 존비속은 절반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복리후생 과다⁶⁾
- 적자 상황에도 일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 지속

5)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매분기(월)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6) 프리존뉴스(www.freezonenews.com), 「임원들이 말하는 쌍용차 사태의 진실」 (2009. 7. 5)

- 쌍용차는 2008년 7,09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노조원 5,156명 중 노조전임자가 17명에 달함⁷⁾
- 완성차업체의 전임자를 비교해 볼 때, 쌍용차 노조의 전임자는 303명당 1명 수준으로 동종업체인 현대차의 조합원 490명당 1명, 기아차의 370명당 1명 수준에 비해 많은 편

〈 완성차업체 노조전임자 현황⁸⁾ 〉

	노조원	노조전임자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현대차	44,168	90	490명당 1명
기아차	28,065	73	370명당 1명
쌍용차	5,156	17	303명당 1명

3. 노조달래기에 치중한 사측의 노무관리 관행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 ‘노조가 밀면 사용자는 밀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
 - 생산중단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준다거나, 파업이 끝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형적인 노사관계 관행이 존재
 - 사측의 이같은 관행은 노조에게 노사간 끈기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파업 등 힘의 과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
- 쌍용차는 지불능력이 없으면서도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여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임금을 인상하고, 2000년 이후 16회에 걸친 파업이 이루어져 회사기물 파괴, 라인 가동중지, 관리자 폭행 등으로 인한 1조원의 매출 손실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⁹⁾
 - 2007년에는 기본급 5만원 인상, 판매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 하였으며, 2008년에는 기본급 6만 2천원 인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지급에 합의하는 등 적자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

7)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쌍용자동차 2008년 사업보고서』 (2009.3.31)

8)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각사 2008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였으며, 상급단체 파견 등은 제외된 것임

9) 쌍용차 임직원이 드리는 호소문 (2009.7.14)

4. 산하노조의 어려움을 투쟁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민노총과 외부세력

- 생존이 걸린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근로손실 및 피해액 누적
 - 7월말 현재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1만 4,590대, 피해액은 3,150억원에 달하고 있고, 채권단은 인력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 표명
 - * 민주노총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반대와 함께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 등을 이유로 7.22부터 총파업 돌입¹⁰⁾
 - * 산하 사업장의 노사화합 선언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경제위기에 따른 노사화합마저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발로 최근 10여개의 사업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등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 현상 발생
- 좌파 성향 학생,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파업 현장에서 불법무기를 제조하고 노조원들에게 사상교육을 주입시키는 등 이념 투쟁으로 사태가 변질¹¹⁾
 -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뿐 아니라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전대련(전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등이 파업 현장에 개입
 - 쌍용차 불법 점거 현장에는 사노준(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위), 사회주의 노동전선 등 좌파 단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쌍용차 사태를 민심 동요 및 이념투쟁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계획
 - * 2006년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내걸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평택 범대위’ 참여 단체들이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에 대거 포함
- 일부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 불법 점거중인 노조원을 격려하고, 정부책임론을 거론함으로써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해 사태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직후인 7.23부터 평택 공장 앞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정부 책임론과 좌파 단체의 연대 촉구¹²⁾

5. 불법, 폭력적인 시위 관행

- 5.31 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거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노조측은 불법으로 공장 점거를 지속
 -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노조측이 사측의 조치에 불응하고 불법으로 공장 점거를 지속함으로써 기업 회생 여건을 크게 악화

1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지침 1호 (2009.7.21)
 11) 쌍용차 임직원이 드리는 호소문 (2009.7.14)
 12) 프레시안 뉴스 (2009.7.29)

- *공장 점거 및 사태 악화가 사전에 예측되는 상황이었으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측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점거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예방적 직장폐쇄가 불가능함에 따라, 노사 간 힘의 균형 상실 초래
- 굴뚝 농성이 하나의 파업 방식으로 정착할 정도로 잘못된 시위 관행 정착
 - 쌍용차 노조는 파업 과정 중 굴뚝 농성을 자축하는 ‘굴뚝 고공농성 50일차 기념식’(7.1)을 개최하는 등 잘못된 시위 방식을 고수
 - 2005년 울산 플랜트 노조 파업, 2006년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2009년 현대미포조선 소각장 등 굴뚝 농성은 민주노총의 파업 방식으로 정착
-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거나,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 위험한 무기를 사용함에 따라, 파업의 과격화 및 부상자 발생으로 연결
 - 6.26 출근을 희망하는 임직원과의 마찰 시 쇠파이프 등에 다쳐 9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여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 파업의 과격화로 연결
 - 경찰이 평택공장 안으로 진입한 7.20~23 사이 3일간의 경찰과 노조원의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6명과 전의경 19명 등 25명이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2명은 중상
- * 지게차를 탄 쌍용차 노조원이 쌍용차 임직원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등이 담긴 내부 충돌 동영상 공개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줌
- * 6.16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창 폭력시위’를 벌임으로써 경찰관 119명 등 154명이 다친 피해 상황 발생¹³⁾
- * 7.23 경기지방경찰청은 노조측이 사용한 불법 시위 용품으로 화염병 342개와 볼트·너트 6100개, 페타이어 105개 방화, 벽돌 40개, 자동차휠 3개 등을 공개
- 투쟁적인 노조 활동은 외국인 국내 투자 유치의 저해 요소로 작용
 - 최근 2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태미 오버비 (Tami Overby)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함¹⁴⁾
 - *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노동자들이 외치는 ‘경영진 타도’ ‘회사를 죽이자’ 등의 구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있음”
 - * “이런 과격한 노동쟁의가 한국의 진면모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 문제만 개선된다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13) 연합뉴스, 「檢, '죽봉시위' 가담자에 징역 2년 구형」 (2009.6.25)

14) 조선일보, 「그녀의 마지막 충고」 (2009.6.12)

6.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 노조의 불법집거가 70여 일째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 * 쌍용차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쌍용차 및 협력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 4만 5,000여명이 서명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7.10)
- 노조의 불법집거와 폭력시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의 장기화되고 과격화되는 문제 초래
 - 사측의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7.1), 공권력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사태의 교착을 초래
 -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던 경찰(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관행 및 채권단의 공장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노조의 불법파업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표명(7.20)
 - * 7.20 3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저항으로 실패
- 선진국은 폴리스라인을 엄격하게 지키는 등 법치주의 준수
 - 지난 4월, 미국 연방 하원인 존 루이스(John Lewis)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 5명 등이 워싱턴DC의 수단대사관 앞에서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 항의 시위를 벌임
 - 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어 수단대사관 쪽으로 다가가자 경찰은 수차례 불법행위임을 각인시킨 뒤 해산명령을 내림
 - 의원들이 불응하자 경찰관들은 주저 없이 루이스 의원의 손을 노끈형 플라스틱 수갑으로 채워 연행
-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에 가서는 폭력시위를 벌이기 어려움
 - 국내와 홍콩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가 2006년 미국에서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자제
 - * 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경찰 100명이 출동하였으며, 부상자 없이 경찰 저지선 침범으로 15명 연행
 -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체포는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원정 시위대가 사전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

7.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

- 쌍용차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기대하며 파업 장기화
 - 노사가 단결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 지속
 -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라며 7.8~17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 * 금속노조의 대정부 핵심 요구사항 :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즉각 투입하라 ▲노정교섭 개최하고 쌍용차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라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고소고발 취하하고, 출입봉쇄 즉각 중단하라¹⁵⁾
 - 민주노총은 폭력시위를 우려한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7.29 평택공장 부근에서 ‘쌍용차 사태 정부 해결촉구 결의대회’를 강행하고, 노-정교섭 등을 요구

15)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2009.7.8)

Ⅲ.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가시화된 이후의 인력 조정은 노사 모두 양보하기 어려워 결국 극단적인 노사마찰로 비화
 - 구조조정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100여명의 인력조정을 위해 협력업체 종업원을 포함한 2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
- 노동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 예방적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등을 허용하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
 - 노조의 불법점거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방적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조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노사의 잘못된 관행 개선
 - 쌍용차 사례에서 보여준 투쟁적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 개선 필요
 - 사측은 노사 간 신뢰구축에 노력하되,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원칙에 입각한 노무관리를 시행
 - 노조는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고, 기업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와 불법투쟁을 지양
 - * 특히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활동가의 입지강화와 투쟁동력 확보를 위한 상급단체의 무분별한 투쟁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함
-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
 -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특히 정부가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히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법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참고자료

1. '04년 이후 쌍용차의 위기 현황

- '04.10 중국 상하이차,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하는 본계약 체결
- '05.12 사측, 내수 시장에서 SUV 판매가 위축되면서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제안, 노조의 반대로 일부 라인만 가동
- '06.6 상하이차, SUV 시장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분을 확대하는 경영 의지를 보였으나 노조는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파업 돌입
- '06.12 쌍용차 노사, '회사가 신규차종 개발 등을 위해 2009년까지 매년 3,000억원 규모로 투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강구, 실행'하는 내용의 특별 합의를 채택
- '07.6 쌍용차 노사, ▲기본급 5만원 인상, ▲판매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 고용보장, 투자집행, 투명경영 등 3가지 특별 협약 등을 내용으로 한 무분규 협상 타결
- '08.7 검찰,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
- '08.10 사측, 휴업은 실시하되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휴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09.9월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정규직 노조와 합의
- '08.11 사측, 휴업 실시 세부사항에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12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규직 노조와 합의
 -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1주일이 지나 희망퇴직 문구를 다시 집어넣고 사실상 강제 희망퇴직을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 '09.1 중국 경영진, 판매 위축을 이유로 생산량 감축과 구조조정이 필수이며 구조조정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노조를 압박, 노조가 물러서지 않자 사측은 기업회생을 신청

2. 쌍용차 파업 경과

- 4.8 사측, 유희인력 2,646명(전체 인원의 37%)에 대한 감원 계획 발표
- 5.8 사측, 경영난으로 유희인력 2,646명 중 사무직 희망퇴직 인원을 제외한 2,400명을 해고하겠다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 4.24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측의 대규모 인원감축안에 반발하여 간헐적인 부분파업 시작
- 5.21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평택공장 점거 및 무기한 총파업 돌입
- 5.28 사측, 유희인력 2,646명 중 사무직·희망퇴직 인원을 제외한 1,112명의 인력감축 규모를 확정하여 노조측에 공식 통보
- 5.31 사측, 노조의 점거 및 출근 저지 등에 대한 대응으로 평택공장(본사) 직장폐쇄
- 6.8 사측, ‘노조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를 유보하겠다’는 사측의 협상안에 대해 노조가 최종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976명에게 해고 통보
- 6.16 비해고 직원, 노조가 점거 중인 평택 공장에 대한 진입 시도
- 6.26 사측, '옥쇄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 희망퇴직 기회 재부여, 영업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의 인력구조조정 최종 방안 제안
 - 976명 해고자 중 최종 실제해고자는 100여명 수준밖에 안된다고 설명
 - 분사와 영업직 전환 320명, 희망퇴직자 450명과 2012년까지 우선 재고용할 100명 등을 감안하면 해고인력은 100여명 선으로 떨어짐
 - 450명에 대해서는 협력사 등에 대한 재취업에 회사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노측,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최종 방안은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7.1 사측,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의 점거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힘
- 7.3 법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 사측,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190명을 상대로 모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밝힘

- 7.7 경기도 평택경찰서, 사측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계고장까지 보냈음에도 노조원들이 퇴거에 응하지 않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에 의해 점거된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힘
- 7.13 사측, 관리직에 한해 회사 본관 건물로 출근시킬 계획이었으나 취소
- 7.14 사측, 노조 불법파업의 부당성과 폭력성, 불합리한 노사관계 청산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 노력 등을 표명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 7.14~17 임직원 400여명, 4일간 평택에서 청와대까지 걷는 ‘도보 릴레이(87km)’를 통해 노조의 불법파업 고발 및 기업의 회생의지를 피력하는 호소문 배포
- 7.19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은 7.20 10시에 채권단 관계자 등과 함께 쌍용차 평택공장의 공장 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 7.20 9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강제 집행에 따른 노사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공장 안으로 전진 배치할 예정이며, 불법 점거가 장기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7.20 법원집행관과 채권단 5명은 총 3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최고장을 노조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노조의 저항으로 실패
 - 7.20 노조가 새총 등으로 저항해 10시경, 10시30분, 11시25분 등 3차례에 걸친 퇴거명령 최고장 전달 시도가 실패
- 7.22 민주노총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반대와 함께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 등을 이유로 총파업 돌입
- 7.29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동회’ 채권단, “31일까지 노조측이 농성을 풀지 않으면 다음 달 5일 조기 파산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 7.30 쌍용차 노사, 사태 해결을 위해 42일만에 대화 재개
 - 노조가 점거중인 도장공장과 사측이 확보한 본관 사이의 임시 컨테이너에서 박영태 법정관리인 등 사측 대표(3)와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노조 대표(4)가 협상 재개
- 8.2 쌍용차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결렬